

전북 농생명산업, 전북특별법 특례효과 '톡톡'

농생명산업지구 지정·공수의 위촉 등 12개 조문 발굴... 현장 실행 본격화 한우 개량·귀농어·귀촌 지원 확대... 맞춤형 정책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특별법'을 활용한 정책 시행을 본격화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공수의 (검사관) 위촉, 한우 개량 전담기관 지정, 귀농어·귀촌 지원 확대 등 12개 조문을 발굴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농촌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전북연구원에서 도, 시군,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생명산업지구 특례 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해 9월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구 7곳을 선정했으며, 이를 국가적 농업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 지역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된 주요 특례 중 하나는 공수의 위촉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6명의 공수의를 위촉해 축산물 위생 및 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도내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도내 한우 개량을 위해 축산연구소를 전국 최초로 한우 개량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기존 국가 주도의 씨수소 중심 개량에서 벗어나 암소의 유전능력을 분석해 맞춤형 개량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우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와 저탄

소 축산물 생산을 실현할 계획이다. 귀농어·귀촌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3년이던 정착 지원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층 지원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만호기자

전북자치도-시군, 재정 신속집행 총력

시설비 집중 집행으로 경제 파급력 강화 우수 지자체에는 7.2억원 인센티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14개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차단체결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14개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도는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신속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금 및 기성금 조기 지급 등 집행 속도를 높이고, 신속집행 자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집행 실적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 차원의 100억원 인센티브 외에도 전북자치도 자체적으로 7억2,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집행률이 높은 시군에는 교부세를 우선 배정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해 신속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각 시군이 제시한 애로 및 건의 사항도 논의됐다. 도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가로막는 국비 미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선 시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기자

전북 대표 플랫폼, 연계 협력 회의 개최

전북사랑도민증·생생장터·투어패스·참참플랫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주요 플랫폼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산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0일 전북사랑도민증, 생생장터, 전북투어패스, 참참 플랫폼 운영 관계자들과 함께 플랫폼 연계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북사랑도민증 이용 활성화 및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관광객 유치, 농산물 판매 확대, 농촌 숙박·체험 활성화 등 다각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플랫폼 간 연계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특히, 전북사랑도민증을 활용한 플랫폼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전략과 단계별 연계 구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플랫폼 간 실질적인 연계 강화를 위해 △전북사랑도민증 접근성 개선을 위한 용어 리브랜딩 검토 △플랫폼 간 교차 혜택 제공 체계 구축 △전북사랑도민증 가맹점 확대 및 투어패스·농촌체험·숙박 연계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만호기자

도, 촘촘한 노인돌봄망 구축 위한 현장 방문·간담회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와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현장 점검 및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10일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 지원기관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 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고령친화 복지 서비스 전진을 점검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인 우리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청취하고,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는 전주 급급노인복지관을 찾아 응급 안전장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 계층 어르신들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모색했다. 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운영하기 위해 광역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지원... 피해자 실질적 어려움 해소 '총력' 시군청 주택 관련 부서·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12개월 동안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자는 신청인이 먼저 납부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나,

다른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12개월간 월 25만원 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까지 더욱 폭넓게 지원하며, 월세 또한 신청인이 선납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사비 지원은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거처로 이주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에만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 전북 도내 모든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하여 적용한다.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자는 1회에 한해 최대 160만 원의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포장이사비·사다리차 이용료·에어컨 이전 설치비·입주 청소비까지 포함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기자

전북자치도는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대상자 선정 후 분기별 지급 절차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에 문의하면 된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보다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지원 절차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2023년 125명, 2024년 234명, 2025년 28명(2월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만호기자

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자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작년과 동일한 3,108대의 참여 차량을 모집한다. 참여 방법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point.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문자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만호기자

단, 차량 소유주가 직접 신청하여야만 최종 승인 처리되며, 1인당 1대 차량만 가능하다. 또한, 사진 제출 순차 순으로 승인되고 사업량이 소진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기간 없이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point.or.kr) 또는 해당 시군청에 문의해 상시 참여가 가능하며, 2008~2024년까지 도내 총 24만 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이만호기자

- 공 고 -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총회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총회를 알리고자 합니다.

#일시 : 2025년 3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 티하우스레몬(서울 강남터미널 2층) / 중식(시래마을)

- 안 건 -

- 결산 보고 ● 감사 보고
- 부동산매도건 ● 종중규약변경건
- 기타 안건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회장 박철진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